

정부 고속통신망 일부 개통, 인터넷 연결도

정부는 15일 광화문종합청사내 11개 부처 PC를 광케이블과 초고속교환기로 상호연결한 고속구내통신망(LAN)을 개통했다.

98년까지 정부청사와 입법·사법부 및 자치단체 등을 광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정부고속망사업의 첫 단계의 완성이다. 정부는 우선 올 연말까지 광화문 1청사와 과천2청사간 정부고속망 구축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정부 고속망사업이 마무리되면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전자결재, 각종 보고, 공문서 유통 등의 사무를 광통신망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민원행정 조회시스템이 가동돼 각종 민원업무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줄어든다.

LAN 개통에 따라 공무원들은 특히 총무처 정부전산정보관리소가 개발한 정부 웹「Welcome To Korea Government」를 이용해 국제기구, 국내외 행정기관과 언론매체, 국내경제관련단체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바다를 손쉽게 누빌 수 있게 됐다.

홈페이지주소를 몰라도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 유엔, 미상무성, 日외무성은 물론 무역협회, 무역공사,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Korea Link)등 국내외 언론사들이 운영하는 웹 서버를 기존전화선보다 1천배가량 빠른 속도로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96.7.15〉

해킹사범 엄격히 처벌하는 형법 발효

검찰은 컴퓨터 해커들을 엄단기로 했다.

서울지검은 시행된 개정형법에 컴퓨터 해킹사범에 컴퓨터 해킹사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 양형기준을 마련 8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설 양형기준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침투해 전산기록 등을 손상시키거나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해당 장치에 장애를 일으킨 「업무방해」해킹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기소된다. 다만 전산자료의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정상상을 참작, 벌금 2백만원 이상에 약식기소된다.

또 컴퓨터에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보게 하는 「컴퓨터 사기」해킹사범의 경우에도 피해액이 5백만원 이상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금융기관등 공공목적에 이용되는 컴퓨터에 침투했을 경우 구속된다.

검찰은 이밖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복제업자와 5천만원이상의 불법복제품 판매업자들을 구속기소하고 불법 복제 게임팩 제조·수출업자 및 2천만원 이상의 판매업자들도 모두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문화일보 '96.7.12〉

한국전산원, 개인 인터넷 주소 무료발급

한국전산원은 최근 개인이 인터넷 주소(도메인)를 신청할 때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계속 무료로 도메인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 한국전산원은 최초 주소 신청시 10만원, 유

지비로 연 5만원을 개인사용자에게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국내 인터넷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계속 무료로 주소를 발급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통신, 이이네트기술, 데이콤등 국내 16개 인터넷 접속서비스업체들은 가입고객 규모에 따라 매년 2백만원~3천만원의 분담금을 한국전산원에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은 주소 끝이 「co.

kr」로 끝나는 도메인명을 무료로 교부받아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정보제공, 전자상거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구역통신망(LAN) 환경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기관도 자신일 할당받은 규모 범위 내에서 무료로 도메인명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조선일보 '96.8.10〉

청소년정보윤리 사업등 지원

초등학교 PC보급과 하이텔 단말기 보급에 사용돼 온 공중전화 낙전(미반환 거스름돈)이 앞으로는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정보윤리제도 등 정보화 촉진사업으로 전환 사용된다.

한국통신은 공중전화 낙전수익을 한국통신의 하이텔 단말기 보급사업에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낙전수입 사용용도를 재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이에 따라 무궁화위성 수신장치 지원사업, 청소년 정보윤리지원사업, 통일대비 통신지원금 적립, 대학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지원사업, 의료분야 정보화사업 등을 낙전 사용처로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이와 함께 카드전용 또는 주화·카드겸용 공중전화기 보급을 확대해 낙전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통신측은 공중전화 낙전수입이 지난 83년부터 95년까지 1천1백75억원이 발생해 초등학교 PC보급사업에 6백40억원, 하이텔 단말기 보급사업에 6백 11억원, 주화카드겸용전화기 개발에 18억원을 사용해 낙전발생액 대비 총사용액이 94억원 초과됐다고 밝혔다.

〈전자신문 '96.8.10〉

한국통신, 평생사용 개인 전화번호 구상

앞으로 개인이 평생토록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갖게 된다.

한국통신은 개인별로 전화번호 하나를 부여하는 개인 번호서비스를 오는 11월부터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지난해말 개인번호서비스를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끝내고 늦어도 10월중으로는 정통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현재 이용약관, 요금 수준 등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개인번호서비스는 가정이나 사무실에 설치된 일반

가입전화번호에 관계없이 개인이 자신만의 고유전화번호를 부여받아 장소를 이동하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능망서비스의 일종이다.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 자신의 개인전화번호를 이동할 장소로 등록하면 개인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이동한 위치에서 받을 수 있게 돼 마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사 등의 이유로 인해 일반 가입전화번호가 바뀌더라도 개인번호는 그대로 유지돼 평생토록 사용할 수 있다.

한국통신은 11자리 숫자로 서비스번호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비스요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월 1천

원 수준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매일경제신문 '96.8.9 >

한통PCS, 중소기업군에 30% 지분배정

한국통신이 개인휴대통신(PCS)사업을 벌일 자회사의 지분 51%를 확보하고 PCS사업자선정에서 탈락한 중소기업군에 전체지분의 3분의1을 배정기로 확정했다.

그리고 PCS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기협중앙회권 소기업에 참여했던 중소기업에 16.67%, 타 중소기업군에 16.67%등 총 33.3%를 배정하고 자회사의 경쟁

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업에 나머지 15.67%를 배정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경쟁력제고를 위해 참여시킬 기업은 유동전문업체 금융기관 광고업체등과 PCS운영기술 수출 등에 필요한 외국기업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개별 접촉후 영입기로 했다.

< 한국경제신문 '96.8.8 >

'원넘버서비스' 도입 경쟁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번호를 하나로 통합해 제공하는 원넘버 서비스(ONS) 도입경쟁이 본격화 하고 있다.

효성그룹이 한·미·일 합작의 효성원넘버를 설립한 것을 필두로 나래이동통신을 중심으로 한 제2무선호출사업자들이 뽀뽀 부가서비스의 하나로 원넘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국통신, 한국이동통신 등 기간통신 사업자들은 기존 통신망의 진화 차원에서 원넘버 서비스를 조만간 도입기로 하는 등 통신서비스의 다양화에 대응한 통신번호 통합서비스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효성그룹은 지난 5일 동경에서 미국의 액세스 라인 테크놀로지사(ATI), 일본의 NTT사 및 마루베니사와 함께 효성원넘버 합작계약을 체결했다.

효성원넘버는 8월 중으로 ATI로부터 원넘버 서비

스 시스템을 도입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사용서비스를 시작하는 한편, 2000년까지 전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래이동통신은 제2무선호출사업자들과 함께 현재의 뽀뽀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음성사서함 서비스와 원넘버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국이동통신도 우선 무선호출과 이동전화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원넘버 서비스를 구상하는 한편 타사업자의 통신번호까지 연계하는 원넘버 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통신도 일본의 원넘버 서비스에 지분참여하는 한편, 지능망 발전계획의 일환인 개인번호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전자신문 '96.8.7 >

정통부 신기술 사업화에 50억지원

정보통신부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력 등이 부족해 사업화를 못하는 기술인력 및 창업기업을

시제품개발에서부터 창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우수신기술지정 및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지원사업 시행 첫 연도인 올해에는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총 50억원이 지원된다.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이 지원사업은 공개모집을 통해 우수신기술 지정신청을 받은 뒤 심의 및 지정절차를 거쳐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제품개발자금 사업관리비 등 소요 비용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제품으로 형상화되기 이전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개인이나 사업개시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국한된다.

정통부는 이달중 사업공고를 거쳐 수시로 지원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단계별 지원내용을 보면 우선 시제품 개발단계에서 우수 신기술당 1억원이내(기술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액)의 자금이 지원되며 수혜업체는 시제품개발을 1년안에 마쳐야 한다.

시제품개발에 성공할 경우 3년 범위내에서 투자 및 기술지원이 제공되며 개발 신제품은 우수신기술지정(IT)마크를 부여받아 대외 공신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매일경제신문 '96.8.1 >

정보엑스포 무료관람 초고속 이용시설 개관

정보엑스포96 조직위는 45Mbps(초당전송속도)급의 'T3' 초고속선을 설치,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될 초고속 공공이용시설을 혜화동 재능교육빌딩 1층에 마련했다.

현재 정보엑스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공공이용시설은 전국에 50여개소.

이중 T3급의 초고속을 채용한 고속 공공이용시설

은 대전 엑스포과학공원과 부산 한국통신 부산지역정보센터를 포함, 3개소가 개설돼 있다.

이날 개관식에서는 T3 T1 28.8K(일반 모뎀속도)급 전용선의 비교시연과 화상회의 진행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T3급 초고속선의 위력을 선보였다.

< 매일경제신문 '96.8.7 >

한국통신, 전화 청약 고장접수 대리점 위탁

한국통신은 전화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반전화 청약 및 고장접수가 입상품 및 무선단말기판매 등의 영업 업무를 민간 대리점에 위탁하는 체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위해 지역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등 10개지역에 위탁대리점을 선정, 오는 9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민간위탁대리점은 한국통신이 앞으로 수행할 CT-2(보행자전용휴대전화)와 자회사를 통해 서비스에 나서는 PCS(개인휴대통신)등 무선통신부문의 대리점역할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탁대리점에서는 1차적으로 일반전화청약 및 고장접수, 시외전화 사전지정제 도입시 한국통신 시외전화가입자 유치, 이지팩스등 가입상품 판매, 지로모집 및 KT카드가입자 모집 등을 맡게된다. 또 CT-2 및 PCS등 단말기의 전시 및 판매와 내방고객의 불편사항 해결 등의 업무도 취급하게 된다.

한국통신은 이번 시범위탁대리점사업자를 상권이 형성된 지역내 1층에 매장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오는 16~31일 각지역본부에서 신청받아 9월 14일까지 선정할 방침이다.

< 한국경제신문 '96.8.10 >